

보도자료		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
배포 일자	2025.10.29.(수요일) / 총 3매 (본문 2, 붙임 1)	
자료 제공	수산연구본부 어업·양식산업연구실 최순 실장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박찬엽 전문연구원 수산연구본부 수산업관측센터 김기완 연구원	
배포 부서	성과홍보실(이준철 전임사무원 051-797-4393, 이제영 실장 051-797-4381)	
보도 일시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, www.kmi.re.kr		

어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및 제도적 개선 방향 제시

-한국해양수산개발원, 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 발표-

한국해양수산개발원(KMI, 원장 조정희)은 『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』를 발표하고,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·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.

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.2%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어업(내수면어업)을 대상으로 했다. 2019년 「내수면어업법」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「양식산업발전법」으로 분법된 이후,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, 「수산업법」 및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서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.

이에 본 연구는 어업 허가·신고 제도의 미비점을 분석하고, 어업허가 세부 기준(주소지 조건, 허가 개수), 신고 기준, 허가 연장 및 변경 절차 등을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.

연구책임자인 최순 어업·양식산업연구실장은 “지자체별로 내수면어업 허가 기준이 상이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, 타 지역민의 허가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민원도 적지 않다”고 말하며 “내수면어업의 특성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”고 언급했다.

연구에서는 ▲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명확화 ▲허가 개수 제한 ▲신고어업 주소지 조건 및 효력상실 요건 ▲허가 지위 승계·변경·폐업 조항 신설

▲허가대장 기록·관리 조항 신설 ▲허가·신고 처리기간 수정 등 6가지 주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. 특히 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“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제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다.” 고 말하며 “이번 연구가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운영과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.” 고 밝혔다.

※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어업·양식산업연구실 최순 실장(051-797-4552) <csoon@kmi.re.kr>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1> 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 제도 개선 과제



내수면어업법 허가·신고제도 개선 과제

	항 목	개선(안)
1	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	〈신설〉 허가 신청 시 주소지 조건 추가하여 관할 지역 거주 주민에게만 어업허가 발급
2	허가 개수 제한	〈신설〉 어선(어구) 당 3건
3	신고어업 주소지 조건	〈신설〉 6개월 이상 관할 지자체 거주 조건 추가
4	신고어업 조업일수 준수 조건	〈신설〉 연간 조업일수 60일 이상 조건 추가
5	신고 효력 상실	〈신설〉 준수사항 위반 시 신고 효력 상실 조항 추가
6	허가 지위 승계	〈신설〉
7	허가·신고의 변경	〈신설〉
8	허가·신고의 폐업	〈신설〉
9	허가 대장 관리	〈신설〉
10	준용 규정	조문별 매뉴얼 작성으로 명확화, 또는 삭제
11	허가, 신고 처리기간	“수면관리자 협의 기간(14일)을 처리 기간 산입에서 제외” 문구 추가
12	신고어업 신고서 서식	법률에 5일로 명시, 신고서 서식 상 1일은 단순 오기. 5일로 수정 필요.

자료: 저자 작성

<붙임2> 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

보고서 원문 URL <https://www.kmi.re.kr/web/board/view.do?rbsIdx=286&page=1&idx=37036>

수시연구

2024-09

내수면어업 허가·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

A Study on Amendments to the Legal System
for Inland Fishing Permits and Reporting

최순 · 박찬엽 · 김기완



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